

15강 - 학교폭력 사건의 구체적인 판례

■ 핵심용어(용어사전)

* 1개월을 이내 (또는 1개월을 넘지 못한다)라는 의미

기간의 계산에 관해서는 개별법률 등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계산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이 적용되며(민법 제155조). 민법에 따르면 주(週), 월(月), 또는 년(年)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前日)로 기간이 만료한다(제160조 제2항).

1개월을 이내 (또는 1개월을 넘지 못한다)라는 의미는 예를 들어 9월 5일 분쟁조정을 개시하였다면 10월4일까지(10월4일을 넘기지 못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음란성 : 그 내용이 사람의 성욕을 자극 · 흥분시키는 것으로서 보통인의 성적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

■ 사례 :

<사건의 개요>

S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A는 같은 반 친구인 B, C, D로부터 아무런 이유없이 6개월간 따돌림과 폭행을 당하다가 청소시간에 대걸레자루로 맞아 팔이부은 거을 보고 A의 부모가 집중 추궁한 끝에 그도안 B, C, D등에게 왕따 및 폭행을 당해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A의 부모는 진단서로 발급받아B, C, D를 상해혐의로 고소하였다. A의 부모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치료비 등 손해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이미 형사고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분쟁조정을 거부하였다. A 및 A의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분쟁해결절차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 사건의 쟁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거부나 중지할 수 있는 사유가 많다. 따라서 민사소송등 소송을 통하지 않고 학교폭력의 재발방지와 피해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여부

<사건의 결말>

A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재센터 또는 학교폭력SOS지원단의 중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학습>

1. 중재제도

가. 중재(Arbitration)란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 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 법정제도이다.

나. 분쟁의 신속하고 경제적인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일도양단적인 판정보다는 당사자간 감정대립을 남기지 않는 장점이 있다.

다. 중재절차에 의해 성립된 화해제약의 효력 및 집행력 확보 방법
중재절차에서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사법상 합의'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합의내용은 공정증서를 이용하면 집행력을 부여받을 수 있다.

라. 서울지방법변호사회 민사중재센터

학교폭력(교내 집단폭행)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한 사례가 있다. 학교폭력사건이 중재로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며 시간적, 경제적으로 소송비용 절감의 효과가 크다.

2. 학교폭력SOS지원단

가. 피해자 측 신청사유 분석

피해자 측 중재개입 신청사유는 진정한 사과 및 치료비, 합의금 조정 52%, 학교 사건 처리 및 징계불만 38%, 객관적 사건조사 10% 순으로 조사되었다. 중재개입 사례 중 신체폭행이 82%로 신체피해율이 높은 수치와 연관성이 있게 나타났고, 이에 따른 적절한 치료비와 합의금 조율이 되지 않아 중재개입을 신청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피해자 측에서 기본적인 진정한 사과 부분과 가해학생에 대한 낮은 징계처분 내용에 대한 불만으로 대부분 중재개입을 신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가해자 측 신청사유 분석

가해자 측 중재개입 신청사유는 진정한 사과 및 치료비, 합의금조정 46%, 학교의 사건처리 및 징계불만 31%, 객관적 입장 사건조사 8% 순으로 조사되었다. 가해자 측 또한 치료비 및 합의금 조율이 가장 큰 신청사유로 나타나 피해·가해자, 학교, 모두 학교 폭력 발생 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과정임을 알 수 있다. 가해자 측의 기타 사유로는 선배들과 연관된 비중 있는 사유, 예방교육을 원하는 사유, 법적해결 등의 사유가 있었다.

다. 학교 측 신청사유 분석

학교 측 중재개입 신청사유는 조정의 한계 50%, 학교 사건처리 및 징계 불만과 진정한 사과와 치료비, 합의금 조정이 각 22%로 조사되었다. 학교 측은 중재자 역할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치료비 및 합의금을 조정하며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한계를 나타내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피해자 측의 징계불만, 가해자 측의 징계불수용 부분에 있어 학교가 이를 설득, 조정하는 데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 상태가 장기화 될 경우엔 학교운영의 어려움으로 연결됨을 알 수 있다.

라. 중재개입 신청사유를 종합분석해보면

피해·가해자 측 신청사유 모두 진정한 사과 및 치료비, 합의금 조정, 학교의 사건조사 및 징계불만이 주된 신청 사유였다. 또한 피해·가해자 측은 사과와 징계 부분에 대한 민감성을 나타내 학교 역할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는 신체적 피해, 정신적 피해로 인해 치료비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합의금 조정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학교 측 신청사유는 학교 측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73%)를 통해 피해·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내려지지만 결국 위와 같은 한계에 부딪쳐 지원단에 중재신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학교 징계나 치료비 및 합의금 부분은 피해·가해자 측의 팽팽한 대립 부분이므로 학교가 감당하기에 역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제3의 중재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3. 학교폭력 피해자 · 가해자 및 학교측의 욕구

가. 내담자 욕구란 내담자들이 중재개입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요구내용들을 말한다. 중재개입 내담자는 피해·가해자, 학교로 구분하였다. 욕구내용은 중재내담자 욕구로 치료비 및 합의금,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각서, 학교징계조정, 기타 항목으로 분석하였다(29개 중재개입 종결 사례 분석).

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피해자 측의 욕구는 치료비 및 합의금 57%,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각서가 31%, 학교징계 조정 8%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욕구에는 경찰고소 원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동행요구 등의 욕구가 있었다. 피해자 측 욕구는 현실적인 면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치료비 및 합의금 욕구가 단연 높은 빈도를 나타내 신청사유와 비슷한 내용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가해자 측과 비교할 때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역속이 31%로 가해자 측에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가해자 측의 욕구는 치료비 및 합의금 55%, 학교징계조정 15%,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각서 5%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욕구에는 형사고소취하, 사건일부 부인, 사실수용 거부, 사건의 객관적 조사 등 피해자 측과 다른 가해자 측의 고유한 욕구들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은 피해자 측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욕구들이다.

학교 측의 욕구는 치료비 및 합의금 47%,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역속 19%, 학교징계조정 5%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욕구에는 자치위원회에 대한 전문기관자문, 법적절차나 교육적 해결방법 등으로 나타났다. 학교 측 또한 치료비와 합의금 문제에 대한 조정 역할의 한계로 인한 적절한 합의금 조정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내담자 욕구를 종합분석해보면

피해·가해자 측 욕구는 첫째, 치료비 · 합의금이 모두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피해자 측은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역속이 두 번째이나 가해자 측과 학교 측은 기타의 욕구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결과는 피해자 측은 진정한 사과와 재발방지역속에 대한 의미가 사건 해결의 중요한 의미가 되고 있다.

둘째, 가해자 측이나 학교 측은 자신들에게 더 중요한 다양한 기타의 요인으로 가해자 측은 형사고소취하, 사건일부부인, 사실수용거부, 사건의 객관적 조사, 등의 억울함이 욕구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중재내담자욕구를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결정적인 욕구로는 치료비 및 합의금, 서면

사과와 재발방지, 그리고 기타의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재내담자들의 욕구와 신청사유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비슷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피해·가해 측 모두 치료비 및 합의금 조율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보아 현실적인 부분의 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학교 측 욕구는 학교 측의 기타의 요인들로 학교폭력 문제해결의 어려움,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전문기관자문, 학교조정 의 어려움 해소, 법적절차나 교육적 해결 등으로 학교 측의 한계를 드러내는 측면에서의 욕구를 나타내고 있다.

4. 중재개입 합의내용

가. 합의내용 : 중재내담자들이 자신들의 욕구를 제시하여 실제로 합의에 이른 내용들을 말한다. 중재개입 합의내용은 서면사과 및 각서, 합의, 치료비 및 합의금 합의, 학교 징계조정 합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합의로 분석하였다.

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합의 내용은 치료비 및 합의금 합의 48%, 서면사과 및 각서 합의 21%, 학교폭력 예방교육합의 17%, 학교징계 조정합의 14%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합의 내용으로는 가해학생이나 부모의 상담교육 화해프로그램 실시, 재발 시 전학, 사건관련 동영상 삭제, 형사고소 사과 등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졌다.

특이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증가를 볼 수 있는데 욕구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재신청 사유와 내담자의 욕구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합의 내용이 내담자의 욕구대로 진행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재개입에 대한 내담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가.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 ②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제12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 2. 피해학생의 보호
 -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 제13조 (자치위원회의 구성)

-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바. 제15조 (학교폭력 예방교육)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 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

-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1. 심리상담 및 조언
 - 2. 일시보호
 - 3. 치료를 위한 요양
 - 4. 학급교체

5. 전학권고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 제16조의2 (장애학생의 보호)

-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5항을 준용한다.

자.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3. 학급교체
- 4. 전학
- 5. 학교에서의 봉사
- 6. 사회봉사
- 7.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8.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 9. 퇴학처분

- 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특별교육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 ③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⑦ 가해학생이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⑧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차. 제18조 (분쟁조정)

①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 협의의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 협의의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카. 제20조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타. 제21조 (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파. 제22조 (벌칙)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

가. 제7조 (자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나. 제8조 (자치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 소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학교의 장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 중 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

④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자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다. 제9조 (자치위원회의 구성)

①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학교의 교감
2.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교사
3. 해당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대표
4. 판사·검사·변호사
5.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②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라. 제11조 (학교폭력예방교육)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되,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학급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3. 학생과 교직원을 별도로 교육함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4.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되,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마. 제12조 (분쟁조정 신청)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 중 어느 한 쪽은 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조정신청의 사유

바. 제14조 (분쟁조정 개시)

①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12조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④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사. 제15조 (분쟁조정 거부·중지 및 종료)

①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 건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종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아. 제16조 (분쟁조정 결과처리)

①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자치위원회는 분쟁당사자에게, 교육감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소속 학교 자치위원회와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3. 조정의 결과

②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자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 제17조 (비밀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명백한 사항

■ 정리하기

중재는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 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로써 분쟁의 신속하고 경제적인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일도양단적인 판정보다는 당사자간 감정대립을 남기지 않는 장점이 있다.

피해·가해자 측 모두 치료비·합의금 문제해결이 분쟁해결의 주된 관심사이며, 피해자 측은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약속을 원하고 있어 피해자 측은 진정한 사과와 재발방지약속에 대한 의미가 사건 해결의 중요한 의미가 되고 있다.

또한 가해자 측은 형사고소취하, 사건일부부인, 사실수용거부, 사건의 객관적 조사 등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유일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규정이다.

비밀누설금지에서 비밀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비밀의 범위 “(1)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명백한 사항”이며, “피해학생의 보호, 장애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분쟁조정”에 대한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평가하기

문제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및 학교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사항을 심의한다.
- (2)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 정답 (3)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문제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피해학생 및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및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학교장에게 피해학생을 위한 조치를 요청한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

(4)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한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 정답 (3)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

문제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분쟁해결 및 비밀누설금지과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3)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4) 비밀누설금지의 비밀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은 제외된다.

해설 : 정답 (4)

비밀의 범위 “(1)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명백한 사항”이며, “피해학생의 보호, 장애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분쟁조정”에 대한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